



2nd Week, December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19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표결, 기초자치단체
경제·관광	서비스, 소비자, 고령, 평가, 투자
지역·사회	대통령, 탄핵, 퇴진, 비상계엄, 촉구

※ 분석 기간 : 12월 5일~12월 11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위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8-10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 - 비상계엄 지휘 논란 - 국정 혼란과 경제 악영향
	탄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핵 표결 진행 - 탄핵 반대와 찬성 충돌 - 탄핵 관련 법적 논쟁
	비상계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정국 혼란 - 계엄 문건 공개 논란 - 계엄 이후 경제 여파
	표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내 표결 과정 - 비상계엄 관련 결의 - 경제 법안 표결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체제 개편 - 재정 분권 강화 - 주민참여 확대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13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직항 노선 확대 - 제주 관광 불편 신고센터 - 민박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산 소진 -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증가 -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고객 서비스 강화 - 교육 서비스 협약 - 민박업 고객 만족도 제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경제 전망 평가 - 관광 만족도 평가 - 농어촌 민박업 경쟁력 평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 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 - 신재생에너지 투자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3~15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 -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 탄핵과 민주주의 위기
	탄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핵 표결 무산 논란 - 도내 시민단체의 반응 - 국제적 이미지 손상
	퇴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퇴진 집회 확산 - 퇴진 요구와 경제적 우려 - 지방자치와 퇴진 연계
	비상계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선포 논란 - 법적 대응 방안 - 계엄과 군부 개입 문제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퇴진 촉구 - 정치적 책임 촉구 - 국제사회 관심 촉구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중국

- ✓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6차 연합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상품 무역, 경제 협력, 기술적 장벽 등에 대해 논의.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고품질로 추진하고,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
- ✓ 광시 남닝시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300여 개 기업을 지원하는 ASEAN 크로스보더 본부를 확장할 계획
- ✓ 광저우 난사에서 “일대일로” 저탄소 서비스 파트너십이 출범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대일로 국가들의 녹색 저탄소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지원을 목표로 설정
- ✓ 중국은 디지털 무역 발전을 위해 ‘디지털 무역 개혁 혁신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9년까지 디지털화된 서비스 무역 비율을 45%로 확대할 목표를 제시하며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
- ✓ 중국 저공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2024년부터 저공항 인프라와 비행 서비스가 확장될 예정. 다양한 비행체와 지능형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저공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
- ✓ 충칭시는 로봇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로봇 기술 혁신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로봇 산업이 제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 해관총서는 기업의 통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16개 조치를 발표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확대와 세금 보증 전자화 등으로 외무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 ✓ 중국은 신형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탄력성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스마트 시티와 연결 자동차 등 11개 주요 과제를 통해 도시의 위험 관리와 거버넌스 능력을 강화할 예정

- ✓ 광저우시는 수소 에너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 관련 조치 발표, 수소 연료 전지 차량과 스마트 통신 기지국 백업 전원 시스템을 통해 수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의회는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2%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며,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경제 패키지를 마련하여 세금 인상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
- ✓ RCEP 지원 기관(RSU) 설립식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으며, RCEP의 전면적이고 고품질 이행을 촉진할 RSU의 공식 운영이 시작. 이 기관은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무역 촉진을 강화할 예정

○ 베트남

- ✓ 베트남은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AI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로봇공학 및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부응하고, 베트남을 아시아의 선도적인 연구개발 허브로 성장시킬 계획
- ✓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

○ 태국

- ✓ 태국 인민당은 방콕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농업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을 제안하고, 사전적인 오염 대응 전략을 촉구
- ✓ 태국은 '주권적 AI'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투자를 유치하고, 태국의 AI 인프라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확장할 예정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국방부장관은 글로벌 권력 투쟁과 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군사 기술을 투자하고, 말레이시아군 현대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강화할 계획
- ✓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사라왁 국경 개발을 위한 37개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보안 강화 및 기초 인프라 개발을 통해 출입국, 검역,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
- ✓ 말레이시아는 해외 벤처캐피털 유치를 위해 국경간 금융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투자자와 스타트업 참여를 촉진하여 금융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예정
- ✓ 말레이시아는 'I-네이션 글로벌 서밋 2024'를 통해 아세안 국가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

○ 싱가포르

- ✓ 싱가포르는 호주와 군사 및 녹색 협력을 강화하며, 2025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세안 및 CPTPP 내에서 다자간 협력을 증진시킬 예정

○ 일본

- ✓ 고치시는 해상 순례길을 전동선으로 교체하여 탈탄소를 추진하고, 소형화된 선박을 통해 운항 요건을 완화하여, 미래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
- ✓ 후쿠시마 시라카와시는 광역 협력을 통해 관광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협력과 연계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예정

- ✓ 요코하마시는 재개발을 통해 녹지 재생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축을 목표로 설정. 인프라 정비와 방재 기능 강화도 추진될 예정
- ✓ 시부기젠은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의 한국 공장 신설을 위한 건설 관리 업무를 수주하고, 클린룸 설치와 VOC 농축 장치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성장을 도모할 예정
- ✓ 미에현은 쿠마노 고도 관광 유치를 위해 특급 열차와 버스를 실증 운행하며,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예정
- ✓ 일본의 과소지역 수도들은 인구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형 정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 협력으로 수도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계획
- ✓ 토토리현은 여성 관리직 비율이 전국 1위를 유지하며, 부업·겸업 프로젝트를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
- ✓ 고치시는 해상 순례길의 전동선 도입을 통해 탈탄소화 및 소음 감소에 기여하고, 향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항 요건 완화를 목표로 설정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4년 12월 4일~12월 11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890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353건, 경제·관광 분야 179건, 지역·사회 분야 358건임
 -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353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표결, 기초자치단체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정치·행정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상정되며 탄핵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지역 내 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결의안을 제안하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책임 문책 ·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됨.
-------	-----	--

		<p>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히 나뉘며 지역 사회에도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지휘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논란에 휘말리며 국회 및 지역사회에서 대통령 퇴진과 법적 책임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의 허위 및 역사 왜곡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 · 대통령 및 관련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계엄 문건 작성 과정과 역사적 사건 왜곡 논란이 공론화됨. 특히 제주 4·3 사건 관련 문구가 국민의 반발 고조 - 국정 혼란과 경제 악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이 심각한 상황. 특히 세수 감소와 지방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실정 · 제주 지역 내 정치적 갈등이 국정 혼란으로 이어지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도의회에서는 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 논의
정치·행정	탄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핵 표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탄핵 찬성 의원들의 적극적 지지와 반대 진영의 반발이 맞물리며 의회 내 갈등이 지속 · 탄핵 표결 결과가 지역 및 전국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음. 제주 지역 내 여당과 야당 의원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탄핵 찬반 여론도 격렬히 대립 - 탄핵 반대와 찬성 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당 주도로 탄핵 찬성 의견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의회 내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 · 탄핵 반대 진영은 정치적 안정과 국정 복귀를 주장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 탄핵이 부결될 경우 정치적 반발이 예상 - 탄핵 관련 법적 논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핵과 관련된 헌법 해석과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 · 탄핵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탄핵이 국회와 사법부 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비상계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정국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주 지역 정치 및 행정체제가 혼란을 겪고 있음.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같은 핵심 현안이 중단되며 국민의 불만이 증가 · 비상계엄이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며 제주 지역 경제와 사회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도민들의 계엄 관련 정보와 대응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 계엄 문건 공개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기획 문건에서 과거 사건이 왜곡된 표현으로 기술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음.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이 국민의 반발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내부 문건의 신뢰성과 계엄 계획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 계엄 문건의 공개 및 진상 조사가 요구 - 계엄 이후 경제 여파 · 계엄 사태로 인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세수 감소와 소비 위축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도의회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 논의 · 계엄 관련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과 지방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정치·행정	표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내 표결 과정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표결 절차를 밟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됨.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책임 규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결의안 표결 결과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집중 - 비상계엄 관련 결의 ·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 도입과 관련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짐. 야당 주도로 진상조사 요구가 강하게 제기 ·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및 정부 인사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 표결이 도의회에서 진행되며 지역사회 여론도 참여하게 대립 - 경제 법안 표결 · 내년도 예산안 표결에서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주요 사업 예산 조정이 이루어짐. 도민 민생 안정과 관련된 예산 항목이 중점 논의 · 표결 결과가 지역 경제 회복과 재정 안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으며, 도의회에서는 민생 경제 지원 강화 방안 모색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체제 개편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가능 여부가 논의되고 있음. 행안부 장관 부재 상황에서도 절차 진행의 법적 가능성이 검토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이 도의회와 도민 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예산 확보와 행정 조직 개편 논의가 병행 - 재정 분권 강화 ·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지방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재정 분권 모델 구축이 요구 · 도내 지방자치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정책적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조 - 주민참여 확대 ·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지역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한 도민 의견이 수렴되고 있음. 주민참여 확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

- 179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서비스, 소비자, 고객, 평가, 투자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경제·관광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직항 노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관계 개선으로 제주~중국 직항 노선이 확대되어 관광 수요 증가 기대. 주당 운항 횟수 112회로 증가하며 겨울 관광 활성화 효과 예상 · 기존 일본·대만 노선 포함 국제선 총 16개 도시 운항. 관광업계는 동계 시즌에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 - 제주 관광 불편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과 사업체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관광 만족도 개선 목표로 소비자 보호 강화 · 주요 불편 사례는 숙박, 렌터카, 음식점 등. 도민과 관광객 간 중재로 신뢰도 회복과 서비스 개선 추진 - 민박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농어촌민박협회, 안전 인증제 및 총량제 도입 공론화. 숙박시장 안정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논의 · 기술 활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마케팅 플랫폼 개발 제안. 민박 경쟁력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산 소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나는전 10% 포인트 적립 중단 예정. 예산 부족으로 소비자 혜택 감소 우려. · 연말 감사 이벤트로 소비자 관심 유도. 결제 상위 사용자에게 포인트 제공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신혼부부 대출 비율 86%, 평균 대출잔액 감소. 가구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경제적 부담 가중 · 주택 소유율 46%로 낮고, 맞벌이 비율 57.8%. 신혼부부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필요 -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불편 신고 403건 중 99% 해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신뢰 구축 추진 ·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정 방안 제시. 공정한 소비 환경 조성 목표
경제·관광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고객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중국 노선 확대, 내·외국인 고객 수요 충족. 중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비수기 시즌에도 고객 중심의 항공 스케줄 운영. 한중 관계 개선과 비자 면제 정책 효과 - 교육 서비스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파크제주, 교육특화서비스 제공 협약 체결. 입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영어·수학 중심 교육서비스와 진로 컨설팅 제공. 거주민 만족도와 고객 신뢰 증대 목표 - 민박업 고객 만족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농어촌 민박업체, 안전 인증제 강화. 고객 신뢰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 VR/AR 기술 활용으로 민박업 운영 효율성 증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경제 전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65.6으로 기준치 미달.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비관적 전망 증가 · 내수 부진과 고금리 영향. 원자재 가격 상승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관광 만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불편 신고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 목표. 관광 관련 불만 처리 시스템 강화 · 소비자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관광 서비스 개선.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속 가능성 강화 - 농어촌 민박업 경쟁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업 총량제 및 허가제 도입 제안. 불법 숙박 문제 해결을 통한 시장 안정 목표 · 강원도 사례 벤치마킹으로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농어촌 관광 모델 구축 방안 모색
경제·관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투자자를 위한 초장기 국채 도입. 연 최대 1억 투자 가능하며 안정적인 수익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 혜택과 장기 저축 수단으로 활용 가능. 개인 금융 안정성과 투자 다각화 지원 - 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경매 증가. 투자자 심리 위축으로 시장 활력 감소 · 주거시설 미분양 증가로 분양시장 불확실성 확대.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 필요 - 신재생에너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완도 해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완화 기대 · 전력 공급 신뢰도 상승과 비용 절감 효과. 제주 지역 에너지 정책 강화와 투자 확대 추진
--	--

○ 358건 지역·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대통령, 탄핵, 퇴진, 비상계엄, 촉구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탄핵 소추안 부결에 강한 반발.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시민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개최. 내란 혐의를 이유로 대통령 및 여당 정치인에 대한 책임 추궁 -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여러 지역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 개최. 국민의힘의 탄핵 소추안 무산에 대한 규탄 목소리 제기
-----	---

지역·사회	탄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진 집회에서 제주 4·3 사건과 계엄 문건 언급. 도민들은 대통령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현 - 탄핵과 민주주의 위기 ·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권한 남용 논란.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헌법 위반 정당으로 규정 · 시민 단체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 탄핵 재추진 촉구. 여야 간 정치적 대립 심화
	탄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핵 표결 무산 논란 · 제주도의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지역 내 정치적 긴장감 고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비판 · 탄핵 표결 무산 후 도민 여론 분열. 일부 시민들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재투표 요구 - 도내 시민단체의 반응 ·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의 탄핵 무산을 내란 동조로 규정.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요구 · 시민단체들이 탄핵 거부를 정치적 책임 회피로 간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탄핵 재추진 강조 - 국제적 이미지 손상 ·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무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 우려. 세계 경제 기관들의 우려 표명 ·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평가받고 있음. 탄핵과 국정 안정 방안 필요
	퇴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퇴진 집회 확산 · 제주지역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진행.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이 주도 · 퇴진 요구와 함께 비상계엄 철회를 주장. 도민들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며 집회의 규모 확산 - 퇴진 요구와 경제적 우려 · 대통령 퇴진 요구가 국정 운영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경제 불안정성 심화 · 정치적 혼란이 국내외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국정 안정화 요구 - 지방자치와 퇴진 연계 · 퇴진 요구가 지방자치제도의 강화와 연계됨. 도민들의 자치권 보호 주장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도민들의 정치적 참여 의식을 강화시키는 계기
	비상계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 선포 논란 ·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됨. 도민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 · 계엄령이 제주 4·3 사건을 왜곡한 역사적 문건과 연관. 역사적 진실 왜곡 논란 확대 - 법적 대응 방안 · 시민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비상계엄 관련 법적 대응 추진. 계엄령의 헌법 위반성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 주장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엄령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지속됨. 도민 여론이 법적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 계엄과 군부 개입 문제 · 비상계엄 하에서 군부의 개입 가능성 우려. 시민단체들이 군부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비판 · 계엄령이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 군부 통제 방안 논의 필요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퇴진 촉구 · 도내 주요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 발표. 대규모 거리 집회 동원 · 퇴진 요구가 계엄령 철회 및 탄핵 소추안 통과와 연계됨. 도민 참여 촉구 - 정치적 책임 촉구 · 여당 의원들에 대한 책임 요구 증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사퇴 촉구 · 도의회 차원의 정치적 책임 촉구 결의안 논의. 탄핵안 재상정 요구 - 국제사회 관심 촉구 · 국제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알리고 협력 촉구. 외교적 대응 방안 논의 · 글로벌 인권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계엄령의 문제점을 부각. 국제적 연대 강화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6차 연합위원회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6차 연합위원회 회의가 12월 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됨. 회의는 양국의 무역 협력 강화와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회의에서는 상품 무역, 경제 협력, 기술적 무역 장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 이행 상황을 공동 검토하고, 전자상거래, 표준 기술 규정, 농산물 검사 검역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이고 고품질의 이행을 추진하며, 협정의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심화할 것에 합의함. 협정은 2015년 발효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 인하와 서비스 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시 남닝, 동남아를 향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시 남닝시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 “남닝 채널, 기회 무한“ 2024년 해외 매체가 남닝을 주목하는 행사에서 20여 명의 해외 언론인들이 남닝의 광시 ASEAN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본부를 방문, 현지 특산품을 홍보하고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체험 - 남닝 ASEAN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본부는 Lazada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TikTok 동남아 TAP 등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300여 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 본부는 동남아 국가에 크로스보더 산업 지원 센터를 확장하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일대일로” 저탄소 서비스 파트너십, 광저우 난사에서 출범
 - 광저우 난사에서 중국 생태환경부 지도 하에 “일대일로” 저탄소 서비스 파트너십이 출범됨. 이 파트너십은 일대일로 국가들의 녹색 저탄소 발전과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지원을 목표로 설정
 - “글로벌 협력, 녹색 미래“를 주제로 한 2024년 진주만 국제 기후 투자 금융 대회가 광저우 난사에서 개막되었으며, 다양한 국가의 정부 관계자, 금융 기관, 기업 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제 협력 방안 논의
 - 파트너십은 정책 대화, 기술 교류, 시범 프로젝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일대일로 국가들의 저탄소 기술 및 녹색 투자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녹색 저탄소 산업과 기술의 보급을 촉진함. 또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 기후 투자 금융 연합체도 창설되어 기후 투자 금융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

- 디지털 무역 발전 체계적 기획
 - 중국 정부는 《디지털 무역 개혁 혁신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디지털 무역의 고품질 성장을 추진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치를 강화할 계획
 - 최근 몇 년간 데이터 중심, 디지털 서비스 핵심, 디지털 주문 및 디지털 전달이 특징인 디지털 무역이 급속히 성장하며 국제 무역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음. 올해 상반기 중국의 디지털화된 서비스 무역 수출입 규모는 1.42조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의견》은 2029년까지 서비스 무역 중 디지털화된 거래 규모를 45% 이상으로, 2035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함.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도모하며, 디지털 무역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저공 인프라 구축 가속화 전망

- 2024년부터 저공 경제가 급성장하며 저공항 인프라, 저공항 비행 서비스, 보안 체계 구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국내 저공항 경제 분야 기업 수는 5만 개를 넘어섰으며, 이 중 상장 기업 118개, 전문화된 중소기업 211개, 첨단 기술 기업 3,991개가 포함됨. 무인기 및 eVTOL 등 다양한 비행체의 등장으로 저공항 인프라 및 운영 서비스가 확장
- 정부는 저공항 지능 네트워크, 저공항 공역 관리 시스템의 완비와 관련 인프라 및 기술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업 모델의 명확화와 시장 구조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따라 저공항 인프라 구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다지역 로봇 산업 발전 지원 정책 발표

- 최근 여러 지역에서 로봇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밀집하여 발표됨. 예를 들어, 12월 4일 충칭시는 《충칭시 지지형 스마트 로봇 산업 혁신 발전 관련 정책 조치》 발표
- 이러한 정책들은 재정 지원 강화, 로봇 기술 혁신,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며, 로봇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함. 특히, 금융 지원이 크게 강화되어 로봇 기업의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를 지원
- 로봇 산업은 인공지능, 5G 통신,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 구조의 최적화와 현대화 경제 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해관총서, 기업 통관 편의 촉진 16개 조치 발표

- 해관총서는 12월 5일 《외무무역 안정 성장 촉진 관련 정책 조치》를 통해 기업의 통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16개 조치를 발표함. 이 조치들은 외무무역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역 활성화를 지원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광
주**

- 16개 조치는 외무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기존 외무무역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고, 크로스보더 무역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
- 특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확대, 세금 보증 전자화, 보세수리 및 재제조 사업의 지원 등을 통해 외무무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외무무역의 전반적인 규모를 확대할 계획

- **신형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탄력성 있는 도시 조성 추진 의견 발표**
 - 중국 정부는 《신형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탄력성 있는 도시 조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된 신형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탄력성 있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
 - 《의견》은 2027년까지 신형 도시 인프라 구축이 현저히 진전되고, 2030년까지 고수준의 탄력성 있는 도시가 완성될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스마트 시티 인프라, 지능형 연결 자동차와의 협력, 스마트 주거단지 개발 등을 포함한 11개 주요 과제를 제시
 - 특히, 스마트 연결 자동차의 응용과 도시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건축물 안전 관리의 디지털화, 디지털 가정 구축 등을 통해 도시의 위험 관리와 거버넌스 능력을 강화할 계획

- **광저우, 수소 에너지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 광저우시는 《수소 에너지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관련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하여 수소 에너지 산업의 체계적 구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 이 조치는 재정 지원 확대, 수소 공급 능력 향상, 대규모 응용 추진 등을 포함한 18개 주요 방안을 제시함. 특히, 수소 생산 프로젝트의 규모 확대와 수소 충전소 건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
 - 또한, 교통 분야의 녹색 대체를 추진하여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의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p>도입을 장려하고, 스마트 통신 기지국의 백업 전원으로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활용을 촉진함. 이를 통해 수소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p>
	<p>○ 인도네시아, 사치품 부가세 인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의회는 저소득층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12%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이번 증세는 주택, 자동차, 비행기, 요트 등 사치품을 대상으로 함 - 현재 10%에서 200%까지 부과되고 있는 사치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지속 적용될 예정임. 이는 중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증세를 목표로 설정 -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경제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며, 주요 생필품과 교육·보건 관련 비용은 면세로 유지할 예정 <p>○ RCEP 지원 기관 공식 운영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 협정》(RCEP) 지원 기관(RSU)의 설립식이 열림. 이 행사에는 ASEAN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등 15개 RCEP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 - 중국은 2024년 RCEP 비ASEAN 차기 의장국으로서 ASEAN 의 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RSU의 설립을 적극 주도함. RSU의 공식 운영 시작은 RCEP의 메커니즘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 - RSU는 RCEP 이행 및 관련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RCEP의 전면적이고 고품질의 이행을 촉진할 것임. 이를 통해 RCEP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과 무역 촉진이 강화될 전망
베트남	<p>○ 베트남, 엔비디아 AI 센터 설립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총리는 엔비디아 CEO와 협약을 체결하여 베트남 내 AI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p>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임. 이는 베트남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비디아는 베트남 최초의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로봇공학 및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지원하며 약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 - 이번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전환 및 중국 의존도 감소와 같은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부응하며, 베트남을 아시아의 선도적인 연구개발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의의를 지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함. 이는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로 간주됨 - 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차원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 전문가들은 이번 CSP 수립이 베트남의 지역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내에서의 추가적인 협력 촉진을 기대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야당, 방콕 미세먼지 완화 대책 수립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인민당은 방콕 전역의 미세먼지(PM2.5) 오염 악화 사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함. 이는 방콕 시민들의 건강 우려 때문임 - 야당은 농경지의 먼지 입자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벼농가 보조금 지원과 피해 농산물의 구매 및 수입 금지를 제안 - 또한, 정부의 사전적인 오염 대응 전략 부재를 비판하며 기존 법령인 '2008년 농업표준법' 준수를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주권적 AI' 이니셔티브에 엔비디아 투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의 '주권적 AI'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엔비디아 CEO가 방콕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지지를 표명함. 이는 태국의 AI 인프라 강화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설정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 시암.AI 클라우드는 주요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건 및 소비자 행동 분석 분야에서 AI 혁신을 촉진할 계획
- 엔비디아는 태국의 숙련된 인력과 전자제품 제조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AI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이번 투자의 전략적 의의를 강조

- **말레이시아 국방부장관, 글로벌 긴장 속 사전적 방어전략 강조**
 - 말레이시아 국방부장관은 글로벌 권력 투쟁과 무역 전쟁,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경계태세 유지를 강조
 - 새로운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군사 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말레이시아군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국방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중립적 외교를 추진하여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

- **말레이시아 경제부, 신규 사라왁 국경 개발사업 37건 승인**
 -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사라왁 국경 개발을 위한 37개 신규 사업을 승인함. 이는 내무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 사업으로 구성
 - 총 배정액은 약 6억 2,200만 링깃(약 2,000억 원)에 달하며, 주요 중점 부문은 국경 보안 강화, 태양열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등
 -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비하여 출입국, 관세, 검역, 보안단지 및 국경 간 도로 등 기초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

- **말레이시아, 벤처캐피탈 활성화 위해 국경간 금융승인 간소화 추진**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를 위해 국경간 금융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 일자리 창출과 인재 개발을 목표로 설정
 - 현재 말레이시아의 벤처캐피탈 환경은 정부 자금에 크게 의존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체 자금의 약 63%가 정부 자금으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벤처캐피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금융 기관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촉진 <p>○ 말레이시아, 아세안 기술성장 촉진 위한 'I-네이션 글로벌 서밋 2024'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는 아세안 국가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네이션 글로벌 서밋 2024'를 개최함. 이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함 - 이번 서밋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 - 말레이시아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31%로 증대하고, AI, IoT,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할 계획
싱가포르	<p>○ 싱가포르, 호주와 군사·녹색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와 호주는 2025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CSP)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며, 상호 군사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 - 양국은 기존 CSP를 통해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CPTPP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킬 전망 - 또한, 식량 안보, 디지털 경제, 공급망 회복력, 대체 연료 개발 등 녹색 이니셔티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며, 호주는 싱가포르의 녹색 프로젝트에 약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일본	<p>○ 고치시, 해상 순례길 전동선 도입으로 탈탄소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치현 고치시는 우아토만을 횡단하는 현영 도선선을 2025년 7월부터 전동선으로 교체함. 이는 디젤선에서 전동선으로의 전환으로, 탈탄소 추진과 소음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새로운 도선선 '우아토'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며,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기존의 '료마'는 연간 19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우아토'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시 CO2 배출량이 제로가 됨

- '시코쿠 온천길'의 일부인 이 해상 순례길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선박의 소형화로 인해 운항 요건도 완화되어 향후 인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음

○ 후쿠시마 시라카와시, 광역 협력 통해 관광 유치 강화

- 후쿠시마현 시라카와시는 아이즈 지역과 도치기현 나스 지역과의 광역 협력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함. 이는 시내 숙박 시설 부족 문제를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기 위함
- 신칸센 역과 공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 및 제안
- 특히, 오사카에서의 프로모션 활동과 만보쿠에 맞춘 연계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 요코하마 산마쓰 후도 재개발, 녹지 재생 및 해안 휴식 공간 조성

- 요코하마시 미나토부의 산마쓰 후도는 재개발 검토위원회가 녹지 재생을 중심으로 시민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신기술의 사회 실험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발표
- 재개발 지역은 약 47헥타르 규모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함. 워터프런트 파크와 산마쓰공원을 잇는 보행자 공간 형성 등이 주요 계획
- 향후 인프라 정비와 공간 디자인의 토대를 마련하고, 방문객 증가를 대비한 수상 교통 및 방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

○ 시부기젠,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 공장 건설 관리 업무 수주

- 규슈 오키나와 지역의 산업용 공조기기 업체 시부기젠은 한국 자회사를 통해 일본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의 한국 공장 신설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위한 건설 관리 업무를 수주함. 수주 금액은 비공개이며, 2026년 초까지 수행 예정

- 시부기젠은 주력 공조기기 판매 외에도 엔지니어링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건설 관리 업무를 통해 공정 품질 관리, 비용 관리, 일정 관리를 담당
- 또한, 반도체 산업을 위한 VOC 농축 장치 개발과 함께 클린룸 설치까지 '솔루션 제안'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성장을 도모

일본

- **미에현 쿠마노 고도 관광 유치**를 위한 특급 열차와 버스 연결 실증 운행
 - 미에현은 JR동해 등과 협력하여 쿠마노 고도의 이세로로 향하는 관광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키하라궁까지의 버스를 실증 운행함. 이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
 - 버스는 기리츠마 역 전에서 출발하여 다키하라궁까지 3 구간을 운행하며, 특급 열차 운행에 맞춰 신규 및 증편을 실시함. 이를 통해 관광객의 버스 이용 증가가 기대
 - 또한, 여행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쿠마노 고도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순례길로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과소지역 수도, 분산형 시스템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협력**
 - 일본의 과소지역 수도는 인구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비용 절감형 분산형 정수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나라마치현 노오바카와마을과 오카야마현 쓰야마시는 소형 여과 장치를 도입하여 관리 부담을 줄이고, 유지비를 절감함. 이는 주민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 공급을 목표로 설정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또한, 도쿄 대학의 교수는 중소기업에서도 분산형 수도 시스템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관련 조사를 예산에 포함시켜 지원할 계획

○ 토토리현, 여성 인력 적극 활용으로 인재 유치 선두

- 토토리현은 도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지역 내 기업에서 부업·겸업으로 활용하는 '토토리 부업·겸업 프로젝트'를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토토리현은 여성 관리직 비율이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과 장애인 고용을 통해 포용적이고 다양성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
- 또한, 현지 기업들은 AI, 5G 통신,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 고치시, 해상 순례길 전동선 도입으로 탈탄소 기여

- 고치현 고치시는 우아토만을 횡단하는 현영 도선선을 2025년 7월부터 전동선으로 교체함. 이는 디젤선에서 전동선으로의 전환으로, 탈탄소 추진과 소음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새로운 도선선 '우아토'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며, 기존의 '료마'는 연간 19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우아토'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시 CO2 배출량이 제로가 됨
- '시코쿠 온천길'의 일부인 이 해상 순례길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선박의 소형화로 인해 운항 요건도 완화되어 향후 인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 가능

*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